

제도경제학의 최근 동향*

장 하 준**

〈 目 次 〉

- I. 서론
- II. 거래 비용적 접근
- III. 여타의 흐름들
- IV. 평가와 전망
- V. 결론

I. 서론 : 제도 경제학의 부활

19세기말 20세기초 영국을 중심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이 발흥하고 있던 당시에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태적인 성격과 그 이론이 기초한 경제주체로서의 개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특히 ‘완벽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의 가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베블렌(Veblen), 코몬스(Commons), 미첼(Mitchell) 등으로 대표되는 이 학파는 소위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의 기치하에, 자본주의 경제는 신고전파 이론에서와 같이 단순히 가격기구(price mechanism)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법률, 사회적 관습(social habit) 등을 포함하는 각종 제도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경제 분석은 제도의 연구와

* 본고는 1996년 2월 14일 개최된 1995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전체회의, “경제학의 최근 연구동향”에서 발표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발표시 토론자로서 여러가지 도움의 말씀을 주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를 기계적 체제(mechanical system)로 파악하는 신고전파의 접근방법을 비판하며, 경제는 진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유기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당시 제도 경제학을 현대적 시각에서 요약, 평가한 글들로는 Hodgson, 1993a와 Samuels, 1995를 보라).

제도학과는 20세기 초반에 최소한 미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그 이후 세련된 이론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일부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극도의 경험주의로까지 흐름으로써, 점점 그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전파 경제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제도학과는 경제학설사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화석화(化石化)된 존재로 전락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학에서 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다시 제도 연구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경이 되면서, 특히 ‘신제도경제학’(新制度經濟學: 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가치하에, 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려는 각종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경제학은 예기치 않은 부흥을 맛보았다(예를 들어 Langlois(ed.), 1986 과 Aoki et al.(eds.), 1990에 수록된 글들을 보라; 최근 제도경제학의 저작들을 정리, 평가한 글들로는 Matthews, 1986, Hodgson, 1988, Eggertsson, 1990, Pitelis(eds.), 1993 등을 보라).¹⁾ 제도경제학의 중흥은, 1992년 현대 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흐름 중 가장 중요한 거래비용적 접근(去來費用的 接近; transaction cost approach)의 창시자인 영국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코즈(Coase), 그리고 그에 이어 1994년에는 거래비용적 접근을 경제사 연구에 이용하여 경제사학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미국의 경제사학자 노스(North)가 거의 잇달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코즈의 수상작으로 꼽힌 두 논문 중의 하나인 “The

1) 많은 현대 제도경제학자들이 ‘신(新)’제도경제학을 주창하는 것은, 이들이 베블렌, 코몬스등에 의해 대표되는 ‘구(舊)’제도 경제학과 같이 제도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제도의 기원을 개인들의 선택 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이론들이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 단순히 신고전파 경제학의 연장으로 보아지지 않고 신‘제도경제학’으로 불러주는 것은, 그들이 제도를 외생적으로 부과된 제약(exogenously-imposed constraint)으로만 보는 신고전파적 접근과는 달리, 제도를 개인들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따른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창출된 내생적인 기제(endogenous mechanism)로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Nature of the Firm”은 1937년 발표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40여년을 잊혀져 있었던 저작이었다는 점은 제도경제학의 부흥에 더 극적인 맛을 더해 주었다.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현대 제도경제학내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며, 이들간의 방법론적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하나의 ‘학파’로서 논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은 ‘제도 연구’라는 명백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이하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들 상이한 접근들간에 상호 교류 및 이론적 접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것이 결코 의미없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다양한 접근들을 ‘현대 제도경제학’이라는, 특별한 ‘학파’를 의미하지 않는 광범한 이름하에 정리, 평가하고, 이들이 경제학의 앞날에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Ⅱ절에서 본고는 현대 제도경제학 중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비용적 접근(去來費用的 接近; transaction cost approach)을 살펴본 후, 제Ⅲ절에서는 현대 제도경제학 내에 존재하는 거래비용적 접근 이외의 흐름들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 본고는 현대 제도경제학의 공헌과 한계를 살펴보고 제Ⅴ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Ⅱ. 거래 비용적 접근

현대 제도경제학의 태두(泰斗)인 코즈는 그의 노벨상 수상작인 “The Nature of the Firm”을 시작하면서 “기업이란 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외의 질문을 던진다. 경제원론을 통해 시장 경제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양대원리(兩大原理)에 의해 운영된다고 배운 경제학도들에게 기업의 기원 자체를 의문시하는 이 질문은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선 철학적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상 신고전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이론체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질문인 것이다.

코즈에 따르면,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상향(理想郷)인 완전경쟁의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완벽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특정 개인들이 항구적(恒久的)인 집단을 형성하여 주어진 위계질서(位階

秩序; hierarchy) 내에서 협동하는, 기업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완벽한 신고전파의 세계에서 모든 생산활동은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거래에 기초한 현물시장(現物市場; spot market)을 통한 계약들만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이란 제도는 별다른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²⁾ 그러나 코즈에 따르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외부와는 ‘단발적(單發的)’ 혹은 ‘일회적(一回的)’인 거래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다.³⁾ 그렇다면 그의 질문대로 왜 조정(調整; coordination)이라는 것이 한 경우에는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른 경우에는 기업가(entrepreneur)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고전파 이론체계 속에 명목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제도가 실제 세계에서는 경제의 핵심적인 존재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코즈의 질문이다.

코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코즈에 따르면, 가격기구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찾고, 계약자와 협상을 하고, 계약을 수립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에 여러가지 비용이 듭을 지적하고, 이런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 내부의 위계질서를 통한 명령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시장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코즈는 계약의 수립과 집행에 드는 이같은 비용들을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비용”(costs of using the price mechanism), 혹은 “판매비용”(marketing cost)이라 불렀는데, 이 개념은 그의 또다른 노벨상 수상작인 “The Nature of Social Costs”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이라 불리워졌다. 거래비용의 개념은 현대 제도경제학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윌리엄슨(Williamson)과 노스 등에 의해 현재 제도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중의 하나로 발전되었다(Williamson, 1975 와 1985; Nor-

2) 따라서 신고전파경제학에서 기업이란 결국 생산 함수(production function) 이상의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그 내부의 경영 조직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미국의 경제학계의 팔방미인으로 알려졌던 보울딩(Boulding)이 언젠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신고전파적 세계에서 기업이란 “그림자와 같은 존재”(shadowy figure)에 불과한 것이다.

3) 시장을 통한 기업과 외부와의 거래가 ‘일회적’ 혹은 ‘단발적’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상대간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만 그 거래 관계가 장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번의 거래에 앞서 거래의 지속여부가 재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 1981, 1984, 1990 등을 참조하라).⁴⁾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함수가 아니고 인간간의 위계질서에 바탕한 제도라는 명제는 사실 코즈 이전에 이미 고전파 경제학에서 스미스(Smith)의 분업론(分業論), 그리고 마르크스(Marx)의 노동과정론(勞動過程論) 등을 통하여 논의된 바 있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 이전의 경제체제와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시장제도의 확립만이 아니라, 복잡한 분업을 조직해 낼 수 있는 근대적 기업제도의 발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 기업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arx, 1976, chs. 13-15). 마르크스는 근대적 자본주의 기업을 “시장이라는 무정부 상태(anarchy) 속에 존재하는 질서(order)의 섬”이라고 부르며, (현대 경제학 용어를 빌려 재해석하자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증대하면서, 시장을 통한 조정(market coordination)보다는 기업 내부의 위계질서적 조정(hierarchical coordination)이 점차 더 효율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시장을 통한 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경제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중앙 계획경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합리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씨앗을 보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코즈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일 기업제도를 통한 사전적 조정(ex ante coordination)이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시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조정(ex post coordination)보다 그렇게 더 합리적인 것이라면,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기업들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면서 궁극

4) 그러나 일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예를 들어 Hodgson, 1988), 윌리엄슨 등 거래비용적 접근을 취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거래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거래 비용을 “사전적으로 계약을 마련하는 비용과 사후적으로 그 계약을 감독(monitor)하고 강제(enforce)하는 비용”으로 보고 생산비용을 “그 계약을 집행(execute)하는 비용”으로 보는 매튜스(Matthews, 1986, p. 906)의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를 좀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경제 주체로서의 인간들의 행위를 상호 조정하는 비용”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거래비용 개념의 정의에 얽힌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Chang(1994, ch. 2)을 참조할 것.

적으로 시장제도가 완전히 쇠멸하고 전 경제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수립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코즈에 따르면, 이것은 독립된 경제주체간의 시장을 통한 거래를 조직하는 데에 거래비용이 요구되는 것처럼 기업 내부의 활동들을 상호 조정하는 데에 “조직비용”(costs of organising)이 들기 때문이다. 코즈는 조직비용은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점에 이르면 기업의 범위를 더이상 확장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고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시점이 오며, 이점에서 기업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코즈의 기업제도에 대한 거래비용적 분석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윌리엄슨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윌리엄슨은 현대 조직행태론(組織行態論)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론의 거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몬(Simon)이 제창한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Simon, 1975과 Simon, 1982등을 참조하라; 그의 주장이 간명히 요약된 저작은 Simon, 1983)과, 자신이 개발한 특수자산(specific asset)의 개념을 거래비용의 개념과 결합하여 코즈의 분석을 더욱 정치화(精緻化)하였다.

윌리엄슨에 의하면,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고 모든 정보가 완전한 신고전파의 세계에서는 계약을 위한 협상, 계약의 작성, 계약 수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강제,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른 계약의 재협상, 수정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래의 모든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대비하는 완벽한 계약(complete contract)이 체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적 행위는 시장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슨은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한 계약을 작성하려면 엄청난 거래비용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고정된 위계질서(hierarchy)를 가진 항구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종종 더 경제적이라 주장한다.

윌리엄슨에 따르면, 어떠한 경제행위가 순수한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기업내부의 위계질서적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제3의 가능성으로서 계약자간의 장기적 상호협동을 수반하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는 그 행위에 관련된 자산의 특수성

(specificity)의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하청계약을 맺을 때 조립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부품이 특수하여 납품업체가 그 부품의 생산을 위해 특수한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면,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조립 가공업체가 납품가격을 강제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계약을 맺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어 그 부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에 필요한 특수자산의 소유자를 보호할 장치(safeguard)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부품의 생산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나오는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보다는, 조립가공업체가 필요한 부품을 자체 공급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라던가,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협동적인 하청관계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윌리암슨의 주장이다.

윌리암슨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경제행위가 시장계약을 통해서 수행될 것인가, 기업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 수행될 것인가, 혹은 다른 어떠한 제도를 통해 수행될 것인가는 생산비용뿐이 아니라 거래비용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여러가지 다른 제도들이 갖는 상대적 거래비용의 크기는 주어진 상황에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된 자산의 특수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거래비용적 분석은 기업제도의 기원 자체에 대한 분석뿐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조직 형태, 생산과정의 조직, 기업금융등 기업제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세부적 주제에 응용되어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자아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윌리암슨 자신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기업사(企業史)의 대가 찰들러(Chandler, 1962, 1977, 1991) 등에 의해 논의된 근대 자본주의 기업의 조직형태의 변화(예를 들어 다부문 기업(multi-divisional firm)의 등장)를 거래비용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Williamson, 1985; 이러한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Lazonick, 1991을 참조하라).

둘째로, 윌리암슨은 자본주의 공장제도하에서 생산기술의 선택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보다는 경영자측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마글린(Marglin, 1974) 등 일부 마르크스주의 노동과정론 연구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비판하는 '비효율적'인 기술들은 생산비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지라도, 거래비용(이 경우에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 내

부의 조직 비용)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제도 연구와 거래비용적 제도 연구간의 대화를 시도하였다(Williamson, 1985, ch. 9).⁵⁾

세째로, 거래비용적 접근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분석에도 응용되어, 투자 자산의 특수성(specificity)의 정도와 금융 조달방식(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인가 채권에 의한 자금 조달인가) 및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간의 관계(Williamson, 1988),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제도(은행 주도형, 주식시장 주도형)와 기업 지배구조간의 관계(Bergloef, 1990) 등에 관한 연구들을 배출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적 분석의 등장으로 인하여 종전의 경제학 분석에서 생산함수 이상의 것이 아니었던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제 점차 제도적 실체를 얻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기업제도의 연구에 한(限)한 한 경제학 분석의 현실성은 최근 들어 제고되었다고 하겠다.⁶⁾

거래비용적 접근의 공헌은 기업제도의 분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접근법이 응용되어 큰 성과를 거둔 또하나의 분야는 재산권(財産權; property rights)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종 법제도의 분석인데, 기업제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발전에도 역시 코즈의 공헌은 지대했다.

코즈는 그의 또 하나의 노벨상 수상작인 1960년 저작 “The Problem of Social Costs”를 통해 거래비용 접근을 외부성(externality)의 분석에 적용하여, 재산권(property rights)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도입하였다. 이글에서 코즈는 외부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산권제도의 미비나 재산권의 ‘잘못된’ 분배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의 수립, 시행, 조정 등에 드는 거래비용이 없

5) 생산과정조직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거래비용적 분석의 종합을 시도한 저작들로는 Pagano(1985)와 Leijonhufvud(1986) 등을 참조하라. 더 최근에 시도된 거래비용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의 대화로는 Bowles & Gintis(1993),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록된 Williamson 과 Stiglitz의 논평을 참조하라.

6) 예를 들어 과거 이 분야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최근 들어 가장 인기있는 산업 조직론 교과서인 Tirole(1988)은 그 서두에서 기업 제도에 대한 거래비용적 접근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티롤의 저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분석은 아직은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단순히 병치(並置)되어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주류경제학이 기업을 분석하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최근 인기있는 경영학의 조직행위론 교과서 Milgrom & Roberts(1992)가 명시적으로 거래비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다면, 관련된 당사자들간이 적절한 계약을 통해 기존 재산권들을 바꾸지 않고도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산권 제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흔히 코즈의 명제(Coase Theorem)로 알려진 이 주장은 이후 외부성문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저자들에 의해 흔히 인용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코즈 자신도 추후 누누히 지적하였듯이 위의 저작에서 코즈가 펼친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글에서 코즈가 펼치고자 한 주장은, 소위 코즈의 명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전파적 가상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거래비용이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세계에서는 재산권이 어떤식으로 분배되어 있느냐가 사회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코즈의 명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Dahlman, 1979와 Farrell, 1987을 참조하라).

코즈의 1960년 저작에서 시작된 재산권의 분석은 이후 여러 방향으로 발전되었다(Barzel, 1988은 재산권 제도에 관련된 최근의 문헌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우선 이 분석은 법경제학(Law & Economics)이라는 분야를 창출하여 각종 법제도의 분석에 응용되었다(법경제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저작들로는 *Journal of Law and Economics*에 수록된 일련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재산권 제도의 분석은 또한 경제사나 개발경제학에 응용되어 흔히 '비합리적'인 제도로 치부되는 소작제, 농노제, 노예제등의 제도들이(최소한 신고전파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용되기도 했다(이러한 연구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Barzel, 1988과 Bardhan, 1989 등을 보라).⁷⁾ 마지막으로 노스는 그의 일련의 저작을 통해, 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비용의 구조가 재산권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어 재산권의 구조는 경제전반의 생산성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제사연구를 통하여 이론화하려 시도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 개발

7) 특히 소작제나 고리 대금업(高利貸金業) 등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존재하는 일련의 '반봉건적' 제도들에 대한 거래비용적 접근들은 이 제도를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일련의 미시적 기제들(예를 들어 토지의 불균등 분배, 인적 자본의 불균등 분배, 농촌 금융시장의 불완전성등)을 동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개혁'(예를 들어 교육제도의 개선이나 농촌 금융시장 개혁 등이 수반되지 않은 토지개혁)들이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여주어 주목을 끌었다(특히 Bardhan(ed.), 1989에 수록된 글들을 참조하라).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반봉건적' 제도들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고전파적인 의미에서 '합리성'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제약 조건 하에서 수행한 최적화 행위의 산물이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고전파적인 틀 밖에서는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는 확실치 않다.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North, 1981, 1990, 1994).

Ⅲ. 여타의 흐름들

1980년대에 들면서 거래비용적 접근외에도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등장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거래비용적 접근을 차용하기도 하고 거래비용적 접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들은 거래비용적 접근과는 구별이 되며, 따라서 이하에서 본고는 이들 중 대표적인 흐름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에 기초한 사이몬의 행태론적 접근(behaviouralist approach)은 1980년대에 들어 몇가지 방향으로 재해석 되면서 발전되어 제도분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 위에서 지적한 대로, 윌리엄슨은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을 신고전파적인 최적화 틀에 접합시켜, 사이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지만, 그 개념을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사이몬 자신은 Simon, 1991에서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과 최적화적 분석틀을 접합시키려는 윌리엄슨등의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하이너(Heiner)는 사이몬의 이론을 수리화하면서 생물학, 심리학과 접합시켜 그 이론을 인간행태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행태 분석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였으며, 그 이론과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과의 접합을 피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Heiner, 1983, 1986), 로스비(Loasby)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사이몬의 이론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의 접합을 시도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Loasby, 1991, 1993).

둘째로, 사무엘슨(Samuelson) 등에 의해 개발된 공공재(public goods)이론을 수정, 일반화하여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분석에 사용한 올슨(Olson)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이 집단이익을 성취하려면 개인들의 이해(利害)와 집단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존하는 많은 경제제도들이 집단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제도분석을 한걸음 더 발전시켰

8) 인간의 사고과정(思考過程)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이몬의 행태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분석이 없이 인간행동을 단순히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스킨너(Skinner) 등으로 대표되는 실험심리학적 행태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원적 저작은 Olson, 1965; 이후 대표적인 저작은 Hardin, 1982). 올슨의 이론은 생물학자 악셀로드(Axelrod, 1984), 정치학자 테일러(Taylor, 1987) 등이 반복경기(repeated game)이론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협동(cooperation) 이론과 접합되어 발전을 이루었으며, 환경문제에 있어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의 과잉착취(over-exploitation; Ostrom, 1990),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이익 집단들(redistributive interest groups)의 번성에 의한 선진국의 제도적 동맥 경화(institutional sclerosis; Olson, 1982), 근접한 소기업간의 협동에 의존하는 '산업 단지'(industrial districts)의 발전(Wilkinson & You, 1994), 심지어는 정치학에 있어 월남전시 공산당의 역할(Popkin, 1979) 등의 문제에까지 응용되는 등, 실증연구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세째로, 최근 별세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마지막 거두인 하이예크(Hayek)와 그의 추종자들은, 신고전파이론의 기계론적이고 정태적인 성격을 비판하면서, 제도의 발생과 유지, 소멸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려 시도하는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에 의하면, 확실성과 완벽한 합리성이 지배하는 신고전파적인 가상세계에서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실세계는 개인 지식의 한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규정되지만, 이러한 세계에서도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에 의해 일련의 사회적 관습과 제도가 형성되고 진화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계획없이 자발적 질서(自發的 秩序)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대표적인 저작들은 Hayek, 1949, 1982, 1988; Vanberg, 1994도 참조하라). 이러한 자발적 질서의 이론은 최근 러시아 출신의 벨기에 물리학자 프리고진(Prigogine & Stengers, 1984; Prigogine, 1986), 북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수학자 겸 경제학자 아서(Arthur, 1994) 등에 의해서, 응용수학에서 발전된 카오스(chaos)이론과 접합되어 사회과학 전반, 그리고 특히 경제학에 응용되어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네째로, 현대 제도경제학에서 거래비용적 접근에 필적할 만한 이론적 중요성을 가진 이론적 흐름으로는 진화론적 접근(evolutionary approach)을 들 수 있다. 경제를 뉴튼적인 기계론적 체계보다는 다아원적인 진화론적 체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구제도경제학의 대표 주자 베블렌, 경제동학(經濟動學)의 아버지 슈페터(Schumpeter), 그리고 심지어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확립한 마샬(Marshall) 등에 의해서도 누누히 지적되었지만, 최근까지 이러한 주장은 정치한 이론이나 확고한 실증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슈페

터의 기술혁신이론을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과 집합시켜 근대적으로 재해석한 벨슨과 윈터의 기념비적 저작(Nelson & Winter, 1982)에 이어,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소위 신(新)슈뎨터주의자들(Neo-Schumpeterian)이라 불리우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생물학, 수학(특히 게임 이론) 등을 응용하여 경제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을 발전시키고 있다(신슈뎨터주의에 대해서는 이하 참조; 최근 경제학에 있어 진화론적 흐름들을 정리, 평가한 저작으로는 Hodgson, 1993b과 Nelson, 1995를 보라). 이들은 경제체제의 진화에 있어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상습적 행동(routine)과 규칙(rule) 등의 제도들이며, 이에 따라 제도의 연구는 경제체제의 진화의 연구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진화론적 접근은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이하 참조)와 경제사 연구(예를 들어 David, 1994)에 응용되어 많은 공헌을 했다.

좀더 응용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첫째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신슈뎨터주의자들에 의한 “국민경제적 기술혁신 체계”(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분석이 눈에 뜨인다. 신슈뎨터주의자들은 기술발전(technical progress)을 경제체제 밖에서 일어나는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신고전파적 접근을 비판하며, 기술발전은 진화론적, 제도론적 시각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이들은 모든 기술적 지식은 기호화(記號化)되기 힘든 암묵적(暗默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한 경제의 기술발전의 성패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이러한 암묵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learning)되고 전파(diffusion)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한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지식습득과정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따라서 한 경제의 기술발

9) 최근 인기있는 “새성장이론”(New Growth Theory)도 기술발전을 내생화함으로써 기존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새성장이론의 기술발전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그 과정에 대한 미시적으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제공하는 신슈뎨터주의이론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혁신이라는 과정이 과연 새성장이론의 모델들이 흔히 취하는 최적화(optimization)적 접근에 의해 제대로 분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새성장이론의 표본적인 저작들을 위해서는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May 199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June 1991),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1994, no. 4),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1994, no. 1) 등에 수록된 논문들을 보라. 제도론적 시각에서 새성장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들로는 유종일과 장하준(1991), Verspagen(1992), Kelm(1995) 등을 참조하라.

전은 기업의 내부조직(특히 R&D, 기능공양성 등과 관련된 요소들), 구매기업과 납품기업간의 관계,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관계, 기업금융 제도, 기술개발에 관련한 정부정책 등 소위 “국민경제적 기술혁신 체계”를 이루는 각종 제도들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전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촉진하는가에 달렸다고 주장한다(Freeman, 1987, Dosi et al. (eds.), 1988, Lundvall (ed.), 1992, Nelson (ed.), 1993). 국민경제적 기술혁신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종전까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경제제도에 대한 진화론적 분석을 기술발전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응용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 주목이 가는 분야이다.

둘째로, 1970년대 중반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지나고 선진자본주의국들 간에 실업률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임금교섭제도(wage bargaining institutions)가 실업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앙집권화된 노조, 중앙집권화된 경영자단체, 그리고 정부등 3자간 교섭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투자, 복지지출의 수준을 정하는 북구제국과 오스트리아등 소위 사회적조합주의(社會的 組合主義; social corporatism) 국가들이 실업률이 낮은 것에 주목하고, 중앙집권화된 임금교섭제도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임금교섭이 집권화되어 있을 때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추가적부담을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실업이라는 형태로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향상을 초과하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중앙집권화된 임금교섭제도를 가진 사회들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Korpi, 1983, Goldthorpe (ed.), 1984, Schott, 1984, Bruno & Sachs, 1985, Pekkarinen et al. (eds.), 1992).

세째로, 일본, 한국등 동아시아 경제의 발흥에 자극 받아 일어난 선별적 산업정책(selective industrial policy)의 효과에 대한 논쟁도, 초기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선별적 개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었지만(초기 논쟁의 대표작들로는 선별적 산업 정책을 옹호한 Magaziner & Hout, 1980, Reich, 1982, Johnson, 1982 등과 그를 비판한 Schultz, 1983, Burton, 1983, Badaracco & Yoffie, 1983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논쟁들을 정리한 문헌들로는 Johnson (ed.), 1984, Thompson (ed.), 1989 참조하라), 그 논쟁이 진행되면서 초점을 점차로 제도분석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의 논

의들은(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선별적 산업 정책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동아시아 제국(諸國)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하고 여타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체계, 수혜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구, 민간기업들간의 선별적 협동 촉진과 갈등해소를 위한 기제등, 선별적 산업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들의 분석을 통하여 선별적 산업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밝히려하고 있다(Amsden, 1989, Okimoto, 1989, World Bank, 1993, Chang, 1994a 와 1995, Lall, 1994).

네째로, 20세기 동안 제조업을 지배해 온 소위 포드주의(Fordism)라 불리우는 대량생산체제(mass production system)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연제조업(柔軟製造業; flexible manufacturing)에 대한 분석도 제도 연구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이 분야의 기념비적 저작은 Piore & Sable, 1984). 유연제조업 연구자들에 의하면, 특수성(specificity)이 높은 기계, 반숙련공(半熟練工; semi-skilled worker), 수직적 통합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기존의 대량생산체제에 도전을 제기하는 주요한 대안적 생산체제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특수성이 아주 낮은 기계, 장인적(匠人的) 숙련공, 인접한 소기업간의 협동에 기초하여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산업단지'(industrial district, Brusco, 1982, Best, 1990, ch. 7, Wilkinson & You, 1994)이며, 둘째는 특수성이 비교적 낮은 기계, 다기능적(多技能的) 숙련공, 장기적이고 협동적인 대소기업간의 하청관계 등에 기초한 일본의 '군살 없는 생산방식'(lean production, Best, 1990, ch. 6, Milgrom & Roberts, 1990, Womack et al., 1991)이라고 한다. 유연제조업의 분석은 이러한 대안적 생산체제가 어떻게 대량생산체제보다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기업내부의 분업과 기업간의 협업 및 분업을 규정하는 각종 제도들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다섯째로, 교과서적 경제학의 제도적인 가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영미식(英美式)의 자본주의와 여타 자본주의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차이점들을 지적하며, 그속에서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를 설명하려 하는 일련의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Zysman, 1983, Cox (ed.), 1986, Dore, 1987 과 1993, Bergeloef, 1990등을

참조하라; 이 논쟁을 대중화한 글로는 Albert, 1991가 유명하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영미식 자본주의의 기업지배제도가 주식시장에 의한 금융조달, 소유의 분산에 따른 궁극적인 감독자의 결여, 경영자들의 잦은 이직을 허용하는 활발한 경영자 노동시장, 적대적 합병(hostile takeover)에 의한 기업경영권 이전 등의 제도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면, 일본이나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식'(continental) 자본주의의 기업지배제도는 은행에 의한 금융조달, 궁극적인 감독자로서의 주거래은행(main bank)의 존재, 경영자 노동시장의 부재, 적대적 합병의 결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때문에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영자들은 '대륙식' 자본주의의 경영자들과 비교할 때 장기적 생산성향상보다는 단기적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근시안적인'(short-termist) 경영을 조장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최근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는 주된 원인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V. 평가와 전망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제도경제학의 르네상스는 처음에는 기존의 지배적인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주변적인 수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그 연구업적이 쌓이면서 경제학의 발전방향 자체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제도경제학이라는 큰 범주 내에는 신고전파 경제학, 오스트리아학과, 슈페터의 이론, 마르크스 경제학, 사이몬의 조직행태론 등 여러가지 사조들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이론적 흐름들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경제학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은 무척 힘이 들다. 이하에서 본고는 제도경제학 내의 다양한 흐름들 간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은 부각시키되 그렇지 않은 차이점들은 약간의 과도한 일반화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현대 제도경제학의 공헌과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제도경제학의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도 경제학에 제도의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사이몬, 코즈 등이 누누히 지적하였듯이 인간들이 무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거래비용이 없는 신고전파적 세계에서는 시장 이외의 제도는 필요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제도마저도 실제세계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법, 관습, 도덕 등에 의해 지탱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물 시장 이상의 것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학의 이론체계 내에는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현대 제도경제학의 등장 이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막상 각종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이 한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대 제도경제학의 탄생 이전에도 구제도경제학의 흐름을 계승하여 제도의 역할을 분석하려 시도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이들의 연구는 적절한 미시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던 관계로 큰 호소력을 가지지 못했다.

현대 제도경제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헌은 바로 구제도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미시적 분석의 결여라는 커다란 약점을 배운 것이다. 구제도경제학은 제도의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도를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제도의 기원이나 발전 자체에 관한 미시적 분석에는 취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나온 제도연구들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행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걸음 진전시켰다. 특히 제한적 합리성 개념의 정치화(精緻化)와 그 응용범위의 확대, 거래비용적 접근에 의한 기업제도의 분석과 재산권제도의 분석, 올슨의 집단행동의 이론과 게임이론의 접합을 통한 협동문제의 분석, 진화론적 접근을 활용한 자발적 질서의 발생에 대한 분석, 기업내 분업조직에 관한 거래비용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간의 논쟁등은 제도의 발생, 유지, 변화 과정의 분석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주었다.

또 한가지 현대 제도경제학이 이론 업적은 제도연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신고전파적 접근, 사이몬의 조직행태론적 접근, 슈페터의 기술혁신론, 하이에크의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이론, 마르크스의 기업이론, 게임이론, 올슨의 집단행동이론등, 이전에는 별로 상호교류없이 지내던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들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종전에 없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대 제도경제학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진화생물학, 카오스이론등 자연과학의 첨단분야에서도 유용한 이론을 차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상이한 접근방식간

의 대화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그들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여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상이한 이론들간의 상호교류현상은 극히 긍정적인 것이며, 앞으로 경제학 이론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제도경제학은 특히 1980년대에 들어 국민경제적 기술혁신 체계, 임금교섭제도, 산업정책관련제도, 제조업 생산체계, 기업지배제도 등에 관한 각종 경제제도의 국제 비교연구를 통하여, 현존하는 경제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이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 논쟁'에 묻혀 무시되었던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단순한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이론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비영미식(非英美式) 제도(예를 들어 일본의 하청 제도, 스웨덴의 임금 교섭 제도)들의 설명에 필요한 새로운 이론들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제도경제학의 이론적 범위 확장과 정교화에 공헌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제도경제학은 아직도 여러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대 제도경제학이 제도의 발생과 발전 뒤에 숨어있는 미시적 기제를 탐구함으로써 제도를 대부분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던 구제도 경제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제도분석의 틀을 마련한 것은 위에서도 지적된 바이다. 현대 제도경제학은 이에 더하여,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로 생겨난 제도들이 역으로 개인의 최적화 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가에 대한 연구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에 있어 제도의 분석이 완전해지려면 우리는 아직도 한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제도들이 그 기원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발생에 관여한 개인들과는 독립적인 존재를 얻게 되고, 그 제약하에서 움직이는 개인들의 가치체계 내지는 선호체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여, 많은 제도들은 개인행동에 대한 단순한 제약으로 작용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선호체계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생적 선호체계(endogenous preference)에 대한 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분야의 연구

수준은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며(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는 Elster, 1983를 보라),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있는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많은 수의 현대 제도경제학자들, 특히 신고전파적 전통 속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경제학에 있어 제도의 분석이 더욱 완전해지려면 제도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규범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선호체계속에 내부화(internalisation)되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신고전파적 방법론에 극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수들(예를 들어 Eggertsson, 1990) 제외하고, 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도분석에 있어 제한적 합리성의 가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의 가정과 많은 현대 제도경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적화 분석 틀간에는 피할 수 없는 이론적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가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한다면 정의(定義)상 최적화 행위는 불가능하고(이것이 바로 제한적 합리성 개념의 창시자인 사이몬이 최적화 대신 ‘만족화’(satisficing)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이다) 따라서 신고전파적 경향이 강한 일부 제도경제학자들이 시도하는 대로 기업들이 당면한 선택의 문제를 신고전파의 ‘이윤 극대화’에서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동시최적화(joint optimization)’로 재구성하는 것은 신고전파적인 완전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의 개념을 제도분석에 밀반입(密般入)하는 것이다. 코즈, 사이몬, 노스, 그리고 윌리엄슨 자신이 누누히 지적했듯이 제도의 기원이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 있다면,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과 배치되는 최적화적 분석틀을 방기하거나 대규모 수정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윌리엄슨의 일련의 저작들은 이러한 갈등의 가장 좋은 예들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진화론적 주장을 원용, 시간이 지나면서 비효율적인 제도들은 도태될 것이므로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완벽한 합리성의 가정하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적화적 분석틀을 방어하려 하지만, 생물학(Gould, 1983; Dawkins, 1986)과 技術史(David, 1994) 등을 통해 발전된 최근의 진화론적 접근들은 진화라는 과정이 반드시 최적의 결과를 낳지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방어는 설득력이 없다(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Nelson, 1995를 참조하라).

세제로, 많은 현대 제도경제학자들(특히 거래비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아직도 신고전파적인 개인의 이기성(self-interestedness)의 가정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윌리엄슨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론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 기회주의적인(opportunistic) 개인을 가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과 같이 감정적으로 맺어진 집단 밖에서는 이기심 외의 인간 동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특히 Williamson, 1993을 보라).¹⁰⁾ 물론,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있어 이기심은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실증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가 개인들의 '완전한' 이기성을 가정할 경우 어떻게 실제세계에서 그다지도 많은 협동적인 제도(cooperative institutions)들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가 힘들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제도들은 이타심이나 책임감 등을 비롯한 도덕적 믿음(moral belief), 이데올로기(ideology)등 비이기적인 동기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경제에서 도덕적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는 Etzioni, 1988, Basu, 1986, Plateau, 1994등을 참조;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North, 1981을 참조). 각도를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애로우, 사이몬등이 누누히 지적했듯이 복잡성(complexity), 불확실성(uncertainty),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으로 규정지어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진실로 신고전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기적인 인간들이라면, 엄청난 감독비용(monitoring costs)과 협상비용(bargaining costs) 때문에 그 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많은 현대 산업사회들이 제대로 기능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은 개인의 이기성의 가정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¹⁾ 개인의 이기성의 가정은 제도분석의 첫단계인 이론적 가설의 수립에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그 가설을 실증연구에 응용하고 그에 비추어 정치화(精緻化)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인들의 동

10) 윌리엄슨의 “기회주의적 개인”이 신고전파 이론의 “이기적 개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동일한 대상에 다른 이름만 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과연 윌리엄슨이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것은, 개인의 합리성을 신고전파의 몇가지 주요 가정들을 부인하는 대신에 개인의 이기심에 대한 가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기 이론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었던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윌리엄슨의 실제 동기가 어떠했던간에 그의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이기성에 대한 가정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갖는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

11) 복잡성,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개인들의 비이기성(非利己性)이 없이 복잡한 조직과 사회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가장 좋은 예는 흔히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쓰이는 “규

기의 복잡성과, 사회화과정을 통한 그 동기들의 내생적 형성과정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제도분석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제도경제학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의 미약함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전파의 가상세계를 일단 떠나면,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및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규정되고 집행되는가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현대 제도경제학, 특히 거래비용적 접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중요한 교훈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규정과 집행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습이나 공동체(community)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규칙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구의 법적 강제력과 그것이 부여하는 정당성(legitimacy) 없이는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것이며(Matthews, 1986), 따라서 국가기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법률을 비롯한 제도를 선택, 수정, 집행하느냐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다(North, 1990). 이에 더하여 폴라니(Polanyi, 1957)와 코즈(Coase, 1988) 등이 강조하였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제도들뿐 아니라 시장제도 자체의 발생 과정에서도 국가의 법적, 행정적인 개입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도 연구에 있어 국가의 연구의 핵심적인 위치는 더욱 명백해진다.¹²⁾ 그러나 최근 발전된 제도경제학의 분석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기업 등 여타 제도의 분석에 비해서 그 발달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많은 수의 현대 제도경제학자

칙대로 일하기”(work to rule)이다. 대부분 현대 제조업의 생산과정은 그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통하여 그 작업내용을 완벽하게 명시할 수 없고, 노동자들의 일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닥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노동자들의 자발적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위해 규칙대로 일을 한다면 많은 공장에서 생산량이 30-5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물론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이 자발적협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애사심, 동료들에 대한 연대감 등등),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동기가 중요한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규칙대로 일하기”의 위력은 개인의 이기심의 가정의 한계를 잘 드러내 준다.

- 12) 신고전파의 영향을 받은 많은 현대 제도경제학자들은 국가를 포함한 각종 비시장제도와 조직들을 시장기구가 실패할 때 나타나는 인위적 대용물(代用物)로 취급하며, 시장제도를 여타의 제도들에 실재적, 개념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신고전파의 거두이지만 현대 제도경제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애로우의 시장 이외의 경제조직(혹은 제도)들은 “가격기구가 실패할 때 집단행동의 이득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Arrow, 1974, p. 33), 윌리엄슨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Williamson, 1975, p. 20)고 말할 정도로 일부 제도경제학자들의 시장의 우선성에 대한 믿음은 강하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할, 특히 거래비용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신고전파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모형을 정치연구에 응용하여 국가를 정치인, 관료, 각종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의 도구로 보는 소위 “신고전파 정치경제학”(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적인 국가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은 현대 정치체도의 제도적 복잡성과 나라간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을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고 정형화된 국가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예를 들어 Colander (ed.), 1984, Alt & Shepsle (eds.), 1990등에 수록된 글들을 보라; 이들의 비판을 위해서는 Stretton & Orchard, 1994와 Chang, 1994a, chs. 1-2, Chang & Rowthorn (eds.), 1995, introduction등을 보라).¹³⁾ 많은 현대 제도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경제체도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국가의 연구에 있어서는 제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적 국가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제도경제학이 그 이론체계에 걸맞는 국가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현대 제도경제학은 그 이론체계의 세련성에 부합하는 국가론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 그 호소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비비하지만 이러한 국가론의 개발을 위한 시도로는 Chang, 1994b와 Chang & Rowthorn, 1995등을 참조하라).

기업이나 국가 등의 ‘집권화’된 제도들을 시장제도를 통한 ‘분권화’된 조정의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윌리엄슨식의 접근과, 역으로 시장제도를 기업 등의 ‘집권화’된 제도들을 통한 조정의 실패에 대한 ‘분권주의적’ 해결책으로 보는 두가지 접근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선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본문에 인용된 코즈와 폴라니의 저작들이 지적하듯이, 근대적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제도는 근대국가(modern state)의 등장과 그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확립된 것이며, 애로우 등이 제의하는 대로 국가 기구가 ‘시장 실패’의 교정을 위해 등장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시장제도에 개념적 우선권을 주는 거래비용적 접근보다는, 시장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들을 동적으로 취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Chang, 1994a, conclusion과 Pitelis (eds.), 1993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조하라).

- 13)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적 국가론은 국가를 플라톤의 “철인왕(哲人王)”과 같이 이타적이고 전능한 존재로 보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편향을 지적하는 중대한 공헌을 했지만,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대 정치체제의 제도적 복잡성이나 정치과정에 있어 비이기적 동기들의 중요성 등을 무시하고 정치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분석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서조중의 한사람인 노스도 지적하듯이, 신고전파 정치경제학 모델들은 주로 미국의 정치체제에 기초한 관계로 상이한 제도와 관습을 가진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힘든 약점을 지니고 있다(North, 1994, p. 366).

V. 결 론

지난 10여년간 제도경제학은 경제학에서 가장 활발한 발전을 이룩한 분야들 중의 하나이다. 한때 경제학과 여타 사회과학의 접경지역에서나 근근히 그 존재를 유지하였던 제도의 연구는 이제 경제학의 중심무대로 그 자리를 옮겨,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경제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본고에서 지적되었듯이 제도경제학이라는 커다란 범주안에 포함되고 있는 이론적 흐름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들 간에는 해소하기 힘든 방법론적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다양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연구, 그리고 나아가 경제학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보아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은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그 접근방법이 다르더라도 현대 제도경제학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흐름들은 제도의 발생, 유지, 발전에 관련된 여러가지 미시적 기제들을 밝혀냄으로써 제도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대 제도경제학은 (i)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포괄적인 분석의 개발 필요성 (즉, 개인들의 선택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제도가 개인들의 선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ii) 제한적 합리성의 가정과 최적화 이론들간의 갈등 해소 필요성, (iii) 단순한 사익추구를 넘어선 개인동기의 다양성을 이론체계에 통합할 필요성, (iv) 제도 분석과 통합된 국가론을 개발할 필요성 등 아직도 극복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제도경제학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혁신적인 흐름들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영문 문헌

1. Albert, M. 1991. *Capitalism vs. Capitalism*, New York, Four Walls Eight Windows
2. Alt, J. & Shepsle, K. (eds.) 1990.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 Aoki, M., Gustafsson, B. & Williamson, O. (eds.) 1990. *The Firm as a Nexus of Trea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5. Arrow, K. 1974. *The Limits of Organisation*, New York, W. W. Norton & Co.
6. Arthur, B. 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7.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8. Badaracco, J. & Yoffie, D. 1983. "Industrial Policy": It Can't Happen Here", *Harvard Business Review*, Nov. /Dec. 1983
9. Bardhan, P. 1989.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Development Theory: A Brief Critical Assessment", *World Development*, vol. 17, no. 9
10. Bardhan, P. (ed.) 1989. *The Economic Theory of Agrarian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 Barzel, Y. 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Basu, K. 1986. "Markets, Power, and Social Norm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986, no. 43
13. Bergloef, E. 1990. "Capitla Structure as a Mechanism of Control: A

- Comparison of Financial Systems” in M. Aoki, B. Gustafsson & O. Williamson (eds.), *The Firm as a Nexus of Trea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4. Best, M. 1990. *New Competition*, Cambridge, Polity Press
15. Bowles, S. & Gintis, H. 1993. *The Revenge of Homo Economicus: Contested Exchange and the Revival of Political Economy*, vol. 7, no. 1
16. Bruno, M. & Sachs, J. 1985. *The Economics of Worldwide Stagf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7. Brusco, M. 1982. “The Emilian Model: Productive Decentralis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6
18. Burton, J. 1983. *Picking Losers ... ? :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 Chandler, A.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 Chandler, A. 1977. *The Visible Han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1. Chandler, A. 1991. *Scale and Scop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2. Chang, H-J. 1994a.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London, Macmillan Press 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23. Chang, H-J. 1994b. State, Institutions, and Structural Chang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5, no. 2
24. Chang, H-J. 1995. Explaining ‘Flexible Rigidities’ in East Asia in T. Killick (ed.), *The Flexible Economy*, London, Routledge
25. Chang, H-J. & Rowthorn, R. 1995.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Change: Entrepreneurship and Conflict Management in H-J. Chang & R. Rowthorn (eds.),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6. Chang, H-J. & Rowthorn, R. (eds.) 1995.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 Coase, R.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o. 4
28. Coase, R.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29. Coase, R. 198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in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 Colander, D. (ed.) 1984.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
31. Cox, A. (ed.) 1986. *State, Finance and Industry in Comparative Perspective*, Brighton, Wheatsheaf Books
32. Dahlman, C. 1979. "The Problem of External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no. 1
33. David, P. 1994. "Why are Institutions the 'Carriers of History'? Path Dependence and the Evolution of Convention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5, no. 2
33. Dawkins, R. 1986. *The Blind Watchmak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34. Dore, R. 1986. *Flexible Rigidities: Industrial Policy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Japanese Economy, 1970-1980*, London, The Athlone Press
35. Dore, R. 1987. *Taking Japan Seriously*, London, The Athlone Press
36. Dore, R. 1993. What Makes the Japanese Different? in C. Crouch & D. Marquand (eds.), *Ethics and Markets*, Cambridge, Polity Press
37. Dosi, G., Freeman, C., Nelson, R., Silverberg, G. & Soete, L. (eds.) 1988.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London, Pinter Publishers
38. Eggertsson, T. 1990. *Economic Behaviour and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 Elster, J. 1983. *Sour Grap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0. Etzioni, A. 1988. *The Moral Dimension*, New York, The Free Press
41. Farrell, J. 1987. "Information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 no. 4

42. Freeman, C. 1987. *Technology and Economic Performance: Lessons from Japan*, London, Pinter Publishers
43. Goldthorpe, J. (ed.) 1984.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4. Gould, S. 1983. *The Panda's Thumb*, Pelikan Books e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45. Hardin, R. 1982. *Collective Ac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6. Hausmann, D. & McPherson, M. 1993. "Taking Ethics Seriously: Economics and Contemporary Moral Philosoph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1, no. 2
47. Hayek, F. 1949.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48. Hayek, F. 1982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49. Hayek, F. 1988. *The Fatal Conceit*, London, Routledge
50. Heiner, R. 1983. "The Origin of Predictable Behaviou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no. 4
51. Heiner, R. 1986. Uncertainty, Signal-detection Experiments, and Modeling Behaviour in R. Langlois (ed.),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 Hodgson, G. 1988. *Economics and Institutions*, Cambridge, Polity Press
53. Hodgson, G. 1993a. "Institutional Economics: Surveying the 'Old' and the 'New'", *Metroeconomica*, vol. 44, no. 1
54. Hodgson, G. 1993b. *Economics and Ev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55.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56. Johnson, C. (ed.) 1984.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San Francisco,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57. Kelm, M. 1995. *Economic Growth as an Evolutionary Process*, ESRC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17
58.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59. Lall, S. 1994. Industrial Poli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osition", *UNCTAD Review*, no. 5
60. Langlois, R. (ed.) 1986.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1. Lazonick, W. 1991. *Business Organisation and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2. Leijonhufvud, A. 1986. Capitalism and the Factory System in R. Langlois (ed.),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 Loasby, B. 1991. *Equilibrium and Evolu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64. Loasby, B. 1993. "Efficient Institutions", *Quaderni di Storia dell'Economia Politica*, vol. 9, nos. 2-3
65. Lundvall, B-A. (ed.)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Pinter Publishers
66. Magaziner, I. & Hout, T. 1980. *Japanese Industrial Policy*,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67. Matthews, R. 1986.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and the Source of Growth", *Economic Journal*, vol. 96, no. 4
68. Marx, K. 1976. *Capital*, vol. 1, Harmondsworth, Penguin Books
69. Milgrom, P. & Roberts, J. 1990. "The Economics of Modern Manufacturing: Technology, Strategy, and Organis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3
70. Milgrom, P. & Roberts, J. 1992. *Economics, Organisation and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71. Nelson, R. (ed.) 1993.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2. Nelson, R. 1995. "Recent Evolutionary Theorising about Economic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3, no. 1
73. Nelson, R. & Winter, S.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74. North, D. 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
75. North, D. 1984. "Transaction Costs, Institutions, and Economic History",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40, no. 1
76.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 North, D. 1994.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3
78. Okimoto, D. 1989.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79.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80.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81.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2. Pagano, U. 1985. *Work and Welfare in Economic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83. Pekkarinen, J., Pohjola, M. & Rowthorn, B. (eds.) 1992. *Learning from Corporatist Experi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4. Piore, M. &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85. Pitelis, C. (ed.) 1993. *Transaction Costs, Markets, and Hierarchies*, Oxford, Blackwell

86. Platteau, J-P. 1994. "Behind the Market Stage Where Real Societies Exist", Parts I and II,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0, nos. 3-4
87. Polanyi, K.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88. Popkin, S. 1979. *The Rational Peasant*, Los Angeles 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9. Prigogine, I. 1986. "Science, Civilisation, and Democracy", *Futures*, vol. 14, no. 4
90. Prigogine, I. & Stengers, I. 1984. *Order Out of Chaos*, London, Harper Collins
91. Putterman, L. (ed.) 1986. *The Economic Nature of the Fi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2. Reich, R. 1982. Why the U. S. "Needs an Industrial Policy?", *Harvard Business Review*, Jan. /Feb. 1982
93. Samuels, W. 1995. "The Present State of Institutional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9, no. 4
94. Schott, K. 1984. *Policy, Power, and Ord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95. Schultze, C. 1983. "Industrial Policy: A Dissent", *The Brookings Review*, Fall, 1983
96. Simon, H. 1975. *Administrative Behaviour*, 3rd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97. Simon, H. 1982.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 Behavioural Economics and Business Organisation*, vol. 2,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98. Simon, H. 1983. *Reasons in Human Behaviour*, Oxford, Basil Blackwell
99. Simon, H. 1991. Organisations and Marke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2
100. Stretton, H. & Orchard, L. 1994. *Public Goods, Public Enterprise, Public Choice*, London, Macmillan Press

101. Taylor, M. 1987.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 Tirole, J. 1988.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s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03. Thompson, G. (ed.) 1989. *Industrial Policy: USA and UK Debates*, London, Routledge
104. Vanberg, V. 1994. *Rules and Choices in Economics*, London, Routledge
105. Verspagen, B. 1992. "Endogenous Innovation in Neoclassical Growth Models: A Survey",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14, no. 4
106.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7. Wilkinson, F. & You, J. 1994.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oward Understanding Industrial District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 6, no. 3
108. Williamson, O.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09. Williamson, O.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10. Williamson, O. 1988. "Corporate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vol. 43, no. 4
111. Williamson, O. 1993. "Calculativeness, Trust, and Economic Organis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6
112. Womack, J., Jones, D. & Roos, D. 1991.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The Story of Lean Production*, New York, Harper Perennial
113. World Bank 1983.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4. World Bank 1987.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5.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6. Zysman, J. 1983. *Governments, Markets, and Growth*, Oxford, Martin Robertson

국문 문헌

1. 유종일 · 장하준, 1991. “새 성장이론의 비판적 검토 - 수렴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논집』, 제 30권, 제 4호